

# 1조1천억원 투입...자립기반 구축에 집중

예산 전년비 43% 늘려...사업화·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입  
예비·3~7년 중견 창업자 정착에 역점...창업교육 대폭 강화

## 정부 올 창업지원사업 살펴보니

자영업자에게 지난해는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경쟁 심화에 인건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겹치며 '최악의 한 해'였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지역만 해도 서민 경제의 첨병이라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 14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새로 창업한 자영업들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포함돼 눈길을 모은다. 정부가 올해 펼치는 창업지원사업을 살펴봤다.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기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통합 공고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은 14개 부처의 69개 사업에 이른다. 전체 예산 규모도 1조1180억원 규모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7796억원)보다 43.4%가 늘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9975억

·89.2%)가 가장 많고 행안부(362억·3.2%), 고용부(280억·2.5%), 과기부(152억·1.4%), 문체부(116억·1.0%) 등이다.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 예산이 5130억원(45.9%)으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3797억원(33.9%)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시설·공간 지원(1493억원·13.4%), 창업교육(471억·4.2%), 멘토링(221억·2.0%),네트워크(66억·0.6%) 사업 등도 추진된다. 특히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후 3년~7년 미만인 중견 창업자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창업 사업화에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이 이들에게 투입된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1010억·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자들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178억·창업진흥원) ▲예비 및 2년 미만 창업자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280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45억·테크노파

## ■2019년 정부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규모

| 구 분           | 중기부                | 행안부             | 고용부             | 과기<br>정통부       | 문체부             | 특허청 등          | 합 계      |
|---------------|--------------------|-----------------|-----------------|-----------------|-----------------|----------------|----------|
| 예산<br>(억원/비중) | 9,975.6<br>(89.2%) | 362.2<br>(3.2%) | 280.6<br>(2.5%) | 152.4<br>(1.4%) | 116.6<br>(1.0%) | 293.4<br>(2.7) | 11,180.8 |

〈중소벤처기업부〉

크 등) ▲해양수산 인큐베이팅(19억·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28억·창업진흥원)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12억·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5억6000만원·" ) ▲K-Globa 스타트업 공모전(10억·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3년 미만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에도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된다. 창업진흥원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1027억원을 들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들을 위한 창업 도약패키지(840억) 사업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들에게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으로 247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진흥원은 아울러 사내벤처팀과 3년 이내 분사한 창업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을 도입, 1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들을 선정, 30억원 규모의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 교육도 강화=창업자들에 대한 사업 지원 뿐 아니라 교육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02억원을 들여 신산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정부는 앞서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을 통해 전국 6곳인 신산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창업진흥원은 또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을 운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76억원을 투입하고 61억원을 들여 창작활동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한편, 각 부처는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털시스템(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자영업 8대정책 살펴보기

정부가 침체된 자영업계를 위한 처방의 하나로 지난 12월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주요 정책 8가지를 발표 했는데 각 정책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현행 1조8700억원에서 향후 4년에 걸쳐 18조원으로 증액해서 발행한다는 한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7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1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이를 매년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서 발행하여 4년간 총 18조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는 얼어붙은 소비를 우회적으로 녹이고 자영업자들의 매출향상을 위한 일종의 직접적인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둘째는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주로 청년창업 육성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 대개의 구도심은 상가 위주의 상권으로 과거에 상권이 많지 않을 때는 르네상스 시기였으나 현재처럼 배후 거주세대가 많은 상권이 다양하게 생겨난 시기에는 근접 소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상 배후 거주세대수가 적은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가 쉽지 않기에 문화예술과 청년창업자 중심의 특화상권으로의 육성과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심재생을 통한 주거 공간 확대를 연계시켜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세째는 전통시장 주자장 보급률 100% 달성 정책이다. 참고로 현행 보급률은 72% 수준이며 향후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주자장의 보급률 확대를 해소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다만, 주자장의 보급률에 걸맞은 각각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주자장 보급률 100%의 기대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줄여 줄 '제로페이' 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된다면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기존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페이 관련결제 방식이라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광주는 3억 9000만원, 전남은 2억7000만원 까지인 한해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폐지하게 되면 전체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는 자영업자 부실채권 9000억원의 조기 정리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 기능 강화 정책이다. 정책의 특성상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경기활성화에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곱째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확대 및 개선 정책이다. 1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지로 보이는 좋은 정책이다. 여덟째는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전문 정책연구소 신설이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빠른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19년은 정부의 업그레이드 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경기가 불날처럼 따뜻하게 되살아나길 기대해본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돌보미 팔찌·친환경 수박박스...동강대 학생들 재기발랄 창업 아이템 붐물



동강대 창업교육센터가 최근 개최한 '2018년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 창업 성과보고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상품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는 8개 창업동아리 팀을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비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했다. 호텔관광과 학생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미 팔찌를 제작,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차지했다. 뷰티미용과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해면을 개선한 클렌징 툴(Tool)을 선보였고 드론과 학생들도 드론을 경사면에서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자동안전랜딩스키드

를 내놓아 상을 받았다. 이외 친환경 수박박스, 위생용품수거함, UVC LED광출력 살균기 등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성과물이 소개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53곳 문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지원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3일 중기부가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공간으로, 3D 모델 파일

과 다양한 재료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전문 랩 5곳, 팹랩 광주 등 일반 랩 60곳을 포함한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전문 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 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토하고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을 운영중이며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 무작정 풍덩하라

# 위터걸스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